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한일관계
[발제자]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일 시]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일관계가 이완되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시작해 냉전기-탈냉전기를 거쳐 2010년대에 들어서 '65년 체제'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 한일 정치리더십의 세대교체가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2010년 이후 일본이 젊은 리더십으로 바뀌어 보수우경화 되면서부터이다. 2018년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초계기, 수출규제, 지소미아, 오염수 문제 등

으로 한일갈등이 심화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외교협력, 정보협력, 가치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에 공동대응하고,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확고히 하는 쿼드(QUAD) 참여, 지소미아(GSOMIA) 강화가 필요하다. 한중일은 동아시아 환경문제, 감염병 문제에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 한일 정부는 현안 문제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인접국가로서 정부 및 비정부간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도쿄 올림픽과 2030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한일 해저터널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영토나 역사문제를 관리하는 외교적,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 한일관계

- ◆ 21세기, 한일관계가 이완되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시작해 냉전기-탈냉전기를 거쳐 2010년대에 들어서서 ‘65년 체제’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 한일 정치리더십의 세대교체가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 이후 일본이 젊은 리더십으로 바뀌어 보수우경화 되면서부터이다. 2018년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초계기, 수출규제, 지소미아, 오염수 문제 등으로 한일갈등이 심화되었다.
- ◆ 90년대 이후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일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경사된 태도를 보이면서 한·중·일 균형외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핵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쿼드 참여문제와 한일협력의 엇박자로 북핵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일 간 해법 역시 다르다.

◆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 ◆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동맹중심의 국제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동맹의 회복, 다자주의 민주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미국 리더십의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 ◆ G2시대의 미중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Pivot to asia’ 라는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 대중압박정책으로 전환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Trump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한 ‘점진적 비핵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에서 한국을 동맹의 핵심축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한미 동맹에 큰 위협은 없을 것이다. 다만 쿼드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참여시키려 할 것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 ◆ 아베정권은 ‘자유와 번영’ 전략을 쓴 아베 1기 정권과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을 중시한 아베 2기 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베 1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중시해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과 함께 중국 포위망 외교를 했다. 이에 가치동맹, 가치 외교로 한국을 대했으나 현재 일본은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일본외교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떨어졌다. 아베 2기 정권에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면서 2016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력공격, 존립위기, 중요영향 사태 등으로 동맹국의 위협이 곧 일본의 존립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 2005년 역사인식과 유엔상임위 가입 시도 등으로 인해 중일 갈등은 격화되었다. 2010년 이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첨예한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해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맞서면서 대립했다. 2012년 이후 아베는 미일동맹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그 결과 바이든 정부가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범위에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건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 ◆ 최근 미일외교국방안보협의회의(2+2)가 있었다. 이는 핵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능력으로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미·일동맹의 강화신호이다. 미일 양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변경을 반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일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미일 간 방위 협력과 쿼드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바이든-스가 미·일 정상회담에도 2+2와 비슷한 미일동맹의 강화 언급이 있었다. 이 정상회담에는 중국의 도전과 남중국해, 북한 비핵화 약속 확인, 유엔결의 이행요구 외에 5G, 반도체, 기술정보협력 등의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한일관계의 갈등 쟁점

- ◆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부

품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일본 호감도가 급락했다. 아베나 스가 지도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나 발언이 강경해지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도 반한, 혐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일 양국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2030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 ◆ 최근 일본의 경화된 자세는 과거사의 재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은 일본에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경제보복을 하면서 한일 간 정경분리의 방호벽이 무너졌다.
- ◆ 지난해 아베정권이 스가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정권을 아베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출문제로 일본과의 상황이 다시금 악화되고 있다.
- ◆ 위안부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가 최근 다른 소송에서는 국가 면제조항을 들어서 주권국가가 남의 주권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제는 2015년 합의를 존중하고 보완하는 차원의 외교 합의가 필요하다.
- ◆ 한일국교협상시 강제징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청구권의 개념과 배상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분리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연동되어있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었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에 못지않은 액수가 보상되었다. 따라서 강제징용문제는 국회에서 건설적인 안을 마련하면 일본과의 협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최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있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IAEA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적, 국제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공조없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여도 이기기 힘들다.

◆ 한일관계의 복원·발전 전략

- ◆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외교협력, 정보협력, 가치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쿼드(QUAD) 참여, 지소미아(GSOMIA) 강화는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다만 동아시아 환경문제 감염병 문제에는 한·중·일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 ◆ 외교정치문제가 해결되면 한일정부 및 비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쿄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2030 부산 엑스포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일 해

저터널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국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영토나 역사문제를 관리하는 외교적,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일협력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